

社會主義 體制改革에서 急進的 接近과 漸進的 接近—特徵과 限界

趙 元 熙

社會主義 體制改革과 關連하여 對立되는 두 가지 이론경향 즉 急進的 接近과 漸進的 接近을 비교 검토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도달점으로서 미리 가정된 이상적인 市場資本主義 모델에 현실의 경제가 얼마나 접근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필자는 해체 직전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붕괴전의 新國家社會主義하에서 국가권력은 이권공동체로 변화된 하부경제단위들에 의해 심각하게 잠식되어 어떤 강력한 집행력도 상실하고 있다. 改革은 체제붕괴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새로운 형식의 '착취관계' 속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최적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로의 분열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상황, 그리고 도달해야 할 목표에 내포된 모순 때문이다.

1. 머리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신고전파의 경우에도 '體制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은 있었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인간이 만든 지적 구성물 가운데 사회주의 개혁에 관한 여러 청사진만큼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끊임없이 내버려진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미 권력기반이 근저에서부터 와해되어 실행력을 대부분 상실한 국가 지도부의 실천의지를 곧 전개될 미래의 현실자체와 혼동함으로써, 개혁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측 또한 대부분 비슷한 속도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개혁과정에 관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보여준 예측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體制改革計劃' 또는 '體制轉換計劃'을 무엇보다 '國家社會主義'체제의 내부 모순의 반영, 또는 그 모순에 대한 지배계층(ruling group)의 '反應樣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떠나 '국가사회주의'의 실제 해체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필자는 구소련등 탈사회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사회에 관한 분석과 예측에 있어 잘못된 결론으로 빠지는 근본원인이 상당 정도 해체되기 직전의 체제의 본질에 대한 물이해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오스트리안 또는 사유재산권을 경제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 財産權學派(Property Rights School)는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처음부터 소유자(=국가)와 대리인(=국가, 기업의 관료)간의 이해불일치, 정보비대칭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문제가 이처럼 단순한 데 있고 문제의 성격 또한 체제 성립 초기나 지금이나 불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시장논리밖에는 알지 못하고 있는 편협된 ‘市場論者’들은 ‘국가사회주의’의 독특한 체제운영 원리를 모르고 있다. 실제 체제해체는 자원배분에 관한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됨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부생산단위들이 과두적으로, 또 중층적으로 생산영역을 분할하여 利權共同體로 만들고 중앙권력을 잠식하면서 각 단위에 있어 생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간에 비대칭성을 심화시킨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중앙권력이 충분히 강력할 때에만 각 생산단위에 대해 성과와 보상을 최대한 연계시킬 수 있으며 자원배분의 ‘합리성’, 즉 생산을 전경제적 고려하에서 일관성있게 배치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해체직전의 국가사회주의는 중앙권력의 지나친 비대화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權力의 지나친 分散 때문에 문제해결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시장자본주의의 경우에는 분권화가 심화될수록 경제적 합리성이 증대한다는 명제가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물론 공황, 기타 수많은 ‘시장실패’, 사회적 갈등 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에 반해 국가사회주의의 경우는 중앙권력이 충분히 강할 때에만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면 국가사회주의는 국가권력을 필요한 만큼 강화시키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왜 자본주의는 필요한 만큼 시장영역을 확대시키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응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여유는 없다. 다만 合理性 提高의 條件은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각각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체제는 진화 발전의 과정에서 증대하는 갈등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개별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장기적으로 체제의 비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어쨌든 대개의 개혁론자들이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中央當局의 執行力은 막상 개혁이 시작될 시점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행하여 그것이 강화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 경제적인 운영방식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정치권력의 성립방식을 바꾸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체제구성의 각 요소간 非整合性은 오히려 증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도 불구하고 왜 정치적 변화가 해체기에 독특한 방향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 또한 동일한 방식, 즉 당위가 아니라 실제의 체제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혹자는 '해체직전의 권력분산은 국가사회주의 운영에서는 불합리성을 증대시키지만 체제 이행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分權化'는 시장자본주의에서처럼 공식화되고 나름대로 공정한 시장메커니즘이라는 상호견제, 조정기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주로 음성적인 거래에 의한 자원배분을 필연화시킨다. 下部 利權集團들의 실제적 권력은 국가의 경영·관리자 임명권이나 자원배분에 대한 제권리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변질된 국가사회주의 그 자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체제이행에 우호적인 세력이 아닌 것이다.

본고는 解體期의 體制構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體制移行에 관한 입장이 왜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로 분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본고가 기여하려는 바는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제시된 몇 가지 설명의 단점을 극복하고, 입장분열의 필연성과 그것 배후에 있는 실제의 문제를 밝히는 데 있다.

우리는 소련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본장의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필요한 변경을 가하면 동구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體制移行을 不可避한 選擇으로 만든 '新國家社會主義體制'의 矛盾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에 생산·분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집중된 單一 피라밋 構造의 체제이다. 따라서 그것이 실령 일관된,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원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저차적인 생산체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이 체제에서는 국가의 최고 결정기구로부터 말단 생산단위까지 연결되는 각각의 垂直的 連繫가 정보의 전달, 의사결정의 집행체널을 구성한다. 한편 '국가사회주의'에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힘, 생산·분배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힘은 궁극적으로 '指導者'에 체현된 '人民意志'로부터 나온다. 일반대중의 상호작용, 외부 적대세력(= '제국주의' 세력)의 위협등의 결과로 탄생한 '지도자'는 그러나 상품경제에서 화폐가 그러하듯 물신화되고 우상화되면 疏外된 支配權力으로 된다. 따라서 일단 '지도자'에 권력집중이 개시되면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집중화는 그 극한까지 진행되려는 힘을 스스로 창출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적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水平的 連繫를 증대시키며, 自律

的 決定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생산력이 증대하고 점점 더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어 수평적 연계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이 단일 위계체제는 비능률적으로 되어 간다. 종종 ‘국가사회주의’는 외연적 성장에는 적합했지만 일정한 자본축적과 산업화가 달성된 다음 내포적 성장을 시도하는 경우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국가사회주의’의 반응은 결코 분권화가 아니며 ‘지도’ 국가권력의 강화이다. 이 반응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며,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증대는 사회에 반대세력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중앙권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된다. 한편 중앙권력의 강화는 필요한 정보의 중간단계에서의 왜곡을 감소시키며, 생산관리에 대한 중앙의 충분한 권한을 유지시킴으로써 이 권한과 중앙당국에 부과된 전적인 경영책임과의 대칭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합리적 반응이다. 어떤 생산양식이건 그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에 대해 지배적 생산관계의 강화로 대응하는 필연적 경향을 생각하면 위의 결과는 결코 예외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의 내부 모순은 ‘지도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그 강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통제된다. 따라서 또 ‘지도자’의 사망과 함께 체제는 곧장 방향 상실, 권력기반 붕괴의 위기에 빠진다. 이 국면에서 개혁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지지하는 이론이 ‘市場(改革)社會主義論’이다. 그러나 기존 지배세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개혁세력은 기득권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공존의 관계를 모색하게 된다. 소련의 경우 스탈린 격하운동, 동구의 경우 여러 자유화운동을 거치면서 결국 ‘국가사회주의’는 당-국가 관료들이 지배하는 新國家社會主義(소위 Neo-Stalinist system)로 이행했다(소련 경우는 브레즈네프 정권에 의해 이 체제 정착). 이 모델은 Flaherty(1992b)가 잘 지적한 대로 국가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생산단위와 가까이에 있으면서 실제 생산을 관리하는 하위 관료층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체제이며 국가권력이 관료조직 내부의 여러 집단간에 분점되어 운영되는 체제이다.

변질된 ‘국가사회주의’의 근본특징은 국가권력이 주로 수직적으로 조직된 여러 非公式 官僚集團이라는 ‘이권 공동체’들에 의해 점유되고 행사되고 있다는 데 있다. 수직·수평으로 진행되는 이익집단간의 비공식적인 협상이 자원배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중앙당국의 일관성있는 배분도 사라지고, 시장에 의한 배분방식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陰性的 協商過程은 자원배분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다. 역설적이지만 이 상황에서 음성적 협상과정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활성화될 때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존재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보편적 원리가 결여되어 있다). 즉, 국가-당 관료들은 국가권력을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용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동일한 정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떠넘긴다는 것이다(결국 부담은 전 인민이 진다).

중앙당국의 자원통제체제는 점점 더 ‘利權化’하면서 단일 위계체계내부에 수많은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이권 공동체’와 ‘후견인’(patronage) 체계로 발전해 간다. 이 조직은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이나 물자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분화·발전해간다. 봉건제하에서 토지소유권이 해체기에 그 어떤 역사적 존재의의도 상실한 채 기생화된 지배 집단의 순수한 착취수단으로 된 것처럼, ‘新國家社會主義’ 말기에는 물자통제력이 이러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당국은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물량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거나(taut planning), 자율권을 강화하는 대신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등을 동원하지만, 이미 ‘지도자’에 의한 인격적 권위가 소멸한 이상 이러한 노력은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신국가사회주의’ 단계에서 국가사회주의의 모순이 발현되는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 자체로 들어나거나 자본주의에서처럼 공황이나 제국대립의 격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일 位階體系의 上層部와 下層部(기업경영자, 하급 당-국가 관료)의 分裂로 나타난다.⁽¹⁾ 상층부는 중앙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생산효율증대, 잉여 극대화, 투자 극대화, 부문간 자원배분 효율증대 등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각의 생산부문으로 내려오면 국가이익과 개별집단이익이 점점 더 괴리되고 분열되어가는 현실에 직면하여 하부지배층은 개별이익의 강화에 집착하게 된다. 그 귀결은 經濟的 不合理性의 극대화로 된다. 예컨대 일반 소비재가 아무리 부족해도 군수부문의 이익은 군수산업이 번창하는 것이고, 이 분야의 ‘이익공동체’는 끊임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군수부문에 자원을 끌어 들인다. 이 과정을 하나의 명제로 요약하자면,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또는 권한과 책임의 분열이다. 국가의 재정적자는 증대하며 통화증발에 따른 은폐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줄서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²⁾ 보상과 노력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괴리함에 따라 노동자가 나태해지고, 잉여가 중간에서 탈취됨에 따라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잉여는 줄어들고, 부문간 배

(1) 노동자들은 국가의 독려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며, 창의력이나 능동적 태도를 상실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적극적인 투쟁적 자세와 정반대이지만 계급적 지배에 저항하는 하나의 형태라는 점에서 본질상 동일하다.

(2) 이에 따라 쓰지 못하고 퇴장되어 있는 화폐량, 소위 monetary overhang이 증대한다.

분의 적합성·합리성도 상실되며 여분과 부족이 공존한다.⁽³⁾

Clarke(1993b)가 지적한 대로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이러한 신국가사회주의의 내적모순, 지배의 위기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명시적으로 어떤 개혁방향이나 지지 세력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권력 최상층부의 선택이었다. 뒤에 밝혀졌지만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결국 체제내부에 누적되어 가던 내부 압력을 적절한 출구를 통해 배출시킴으로써 지배 질서의 급격한 와해를 막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르바초프가 시도한 ‘체제개혁’은 왜 궁극적으로 ‘市場強化’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초기 정책 방향을 보면 사회주의체제를 시장강화로 혁신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거나, 제도적 법적 틀을 개혁함으로써 혁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과가 없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연방분열 세력을 급속히 성장시킨 결과를 낳았다.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우리는 고르바초프가 말하는 ‘人間的 民主社會主義’(humane democratic socialism) 또는 그것보다 더 세련된 民主社會主義 모델을 얼마든지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심화,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 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기존체제를 반대하는 ‘민주적 세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력 이외에 어떤 것도 그 성장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권화된 권력을 해체시키고 책임과 권한의 대칭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유일한 방법은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단위간에 경쟁을 시키고 상호 이익을 시장에서 충돌시켜 보다 합리적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⁴⁾ 이를 위해서는 생산을 중앙계획하에 묶는 것이 아니라 경영회계단위를 보다 작은 생산단위로 분할해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후기 집권기간 동안 하는 수 없이 이 ‘시장강화’에 집중했다. 그러나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에 따라 그의 권력기반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체제개혁’ 시도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民族主義的 政治運動은 우연한 현상일까? 이 ‘운 나쁜’ 사태만 없었다면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성공할 수도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

(3) Post and Wright(1989)는 부족(shortage)과 여분(slack)의 공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4) 중앙당국은 더 이상 효과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하부로 이동한 힘들을 보다 공개적이며 공정한 제도를 갖춘 시장에서 서로 충돌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중앙의 조정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는, 과거 동구에서 이미 사용한 ‘改革社會主義’의 방법이다. 소련에서는 동구와 같은 2단계 발전이 고르바초프, 엘친정권에 걸쳐 하나의 연속과정으로 압축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련에서는 신국가사회주의가 이미 심화된 상태에서 개혁이 시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다. 민족주의 운동이란 근본적으로 단일 위계체계로 되어 있는 국가사회주의의 와해에 있어 하나의 ‘축대제’, 또는 崩壞樣式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보다 엄밀히 논증해 보자.

신국가사회주의하에서는 계획과 시장, 지도와 자율,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 민주적 결정과 ‘지도’에 의한 결정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회복에 의한 문제해결의 길은 이미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소위 자율적 영역의 확대라는 이름하에 시장 도입을 촉진하게 된다(소위 ‘調節된 市場經濟’). 그러나 이 자율영역의 확대는 순조롭게 ‘부르주아적’ 방식에 의한 균형회복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권공동체로 조직된 생산단위들은 지금까지의 중앙계획경제에 의한 물자조달, 완성품 배분방식의 후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이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도입되면 각 생산단위가 자기 통제하에 있는 자원을 전체가 아니라 자기 이익 추구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신국가사회주의하에서 각 생산부문의 비례관계는 크게 파괴되어 있다. 또한 시장의 수요구조는 과거 국가주문과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심각한 構造的 需給 不均衡이 전경제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제 각 집단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홍정의 수단’(bargaining chips)으로 전환시킨다. 종종 지금까지 소규모로 흩어져 있던 생산단위들은 더욱 하나로 뭉쳐 자신의 자급력과 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최종적으로 각 생산단위간의 분업체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전경제의 축소재생산, 전반적인 물자부족이 발생한다. 그 결과 시장 또는 그 어떤 거래원리도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는 ‘개혁’의 불충분, 즉 시장기구가 미발달하여 가격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독점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과와 원인을 혼동한 것이다.⁽⁵⁾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왜 극단적으로 강화되는가? 그것은 신국가사회주의하의 하부 관료, 기업관리 등 하층 지배계급이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집단들의 생존을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할 때는 그 권력을 상실하고 냉담하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勞動者集團(그 가족 및 은퇴노동자 포함)의 보다 적극적인 반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예컨대 1991년의 소련 광부 스트라이크). 따라서 하층 지배계급은 체제의 해체위기, 지배 권력 위기에 직면하여 노동자집단과 밀착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보다 큰 사회적 규모(지방자치지역, 인종집단)로 이 下方聯合이 발생하는 특이한 경우가 바로 민족주의 운

(5)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생산감소와 혼란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신고전파와 케인지언 이론이 부적절하다는 데 대해서는 Schmieding(1993)이 잘 논증해 주고 있다. 그는 혼란의 원인을 주로 필요한 제도적 틀의 미발달, 新-舊制度간의 不整合性에서 구하는 재산권학파의 설명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접근법도 결국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

동이 되는 것이다. 지방의 지배계급은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자기 민족의 이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중앙권력에 싸움을 걸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지배 권력의 연장·강화를 꾀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결코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의 部門別分裂(systemic dissolution in the sectoral line)의 실제적인 전개에 불과하다.

한편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중앙권력은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이 증대되는 원심력에 직면하여 생산감축·재정적자를 통화증발·외국 차관 등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마치 두뇌와 몸이 분리된 유기체처럼 중앙 당국과 하부 생산기구는 분열되고, 중앙당국을 대개하여 통합되어 있던 하부생산조직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논리를 따라 분열된다. 이 분열은 ‘신국가사회주의’의 내적 모순, 그것에 근거한 경향법칙의 최종적인 귀결이다.

3. 體制轉換을 둘러싼 立場의 分裂—急進主義 對 漸進主義

국가사회주의의 해체에 따라 ‘체제 전환’, 자본주의로의 신속한 이행이 유일한 선택으로 된다. ‘체제전환’(systemic transformation)은 우선 분열된 지배계급 모두에게 적어도 그 방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대안이다. 국가사회주의의 해체는 인민의 생존에 관한 권리-의무,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경영을 둘러싼 권리-의무 등에 관해 완전한 無政府狀態, 일관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상태의 지속은 전 지배계급의 동시적 몰락, 수동적으로 있던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원칙에 관한 한, 구 지배계급은 자본주의로의 迅速한 體制 移行을 희망하게 된다. 특히 하층부의 경우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본가로 변신함으로써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를 원할 것이다. 재산권이 私的인 개인 또는 집단의 소유로 되면 국가권력 또한 국가사회주의에서처럼 전인민의 공동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유지시키는 ‘公權力’으로 전환된다(이 경우 사적 권력은 자본가가 가짐으로써 권력은 이중화된다). 구체제 상층부는 이 공권력의 담당자로 변신하기를 원할 것이다.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안정된 체제하에 지배계급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인 것은 자명하다. 노동계급도 자본주의는 명백히 하나의 착취체제이지만 그것보다 나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理想狀態(ideal state)로 갈 것인가에 대해 상-하층계급은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된다. 이 다른 리

害關係는 정치무대에서 급진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⁶⁾

우리는 이 정치적인 입장차이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인 차이, 즉 ‘체제전환’에 대한 ‘急進主義’(radicalism, shock theory, big-bang approach)와 ‘漸進主義’(gradualism)를 대비하고 분석함으로써 체제전환의 근본 과제를 둘러싼 입장차이와 입장분열의 근거를 밝혀보도록 하자. 우선 根本課題는 무엇인가? 통상 부르주아이론은 자본주의체제를 가장 자연스러운 질서로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선택을 보장하며 또 그 선택의 결과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 체제는 ‘국가사회주의’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명백히 하나의 榨取體制이다. 국가사회주의 성립이 하나의 물리적 강제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성립 과정 또한 매우 완만하였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는 않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어쩌면 이보다 더한 강제와 희생을 동반하였다.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자본은 ‘은 몸에 피를 뒤집어쓰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소위 자본의 原始的 蓄積過程). 결국 하나의 생산양식이 착취체제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생산자들을—직접적 강제에 의하건 소유에 의하건—지배관계속에 복종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있어서도 근본과제는 어떻게 생산대중을 임금노동자로서 자본에 복종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이 무엇인가 이다.

시장사회주의와의 논쟁에서 사적 소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던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가 최근 체제전환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는 ‘급진적 접근’을 주장하는 신고전학파에 반대하면서 ‘점진주의’를 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이렇게 두 경우에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검토해 보면 세 학설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잘 들어난다. 우선 市場過程에 관해서 시장사회주의자들과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靜態的 接近을 취한다. 즉 시장이란 무엇보다도 주어진 조건하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시키는 기구이며 시장가격은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신호(signal)일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안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 시장과정은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는 과정이고 시장가격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즉 動態的 接近을 취한다. 또 시장사회주의나 신고전학파는 재산권의 배분상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해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보지만, 오스트리아안은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성의 발휘를 위해 사유재산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시장사회주의자들과 신고전파체제는 동일하다.

(6) “모스크바의 두 급진-보수분파는 각각 분열된 두 세력을 대표한다. 그것은 소련경제의 산업조직에 뿌리를 둔 보수세력과 소련사회의 정치기구를 장악한 급진세력이다” [Clarke(1993c, p. 237)].

재산권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시장사회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오스트리아인은 급진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최근 신고전파의 논쟁에서는 왜 ‘점진주의’를 택하게 되는가? Poznanski(1992)는 개혁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아학파를 칭송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석했다고 불평한다. 즉 오스트리아인은 자본주의 경제를 인간본성에 적합한 질서로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적절한 질서를 국가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시장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적은 제도가 자연스럽게 선택되고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 [Poznanski(1992, pp. 57~58)]는 것이다. Murrell(1992)도 급격한 국가기업의 해체에 의한 사기업 창출을 비판하면서 하나의 조직·제도는 그에 고유한 인센티브 구조를 내포하며 사회가 필요한 정보를 보존·가공하는 곳이며, 이 ‘社會的 資產’은 사기업이 성장하는 과도기 동안 요긴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인은 자본주의가 재산권,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정착될 때 생산·분배를 둘러싼 권리-의무가 분명해지고 시장경제의 적극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무소유상태와 그에 따른 자본에 의한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인은 이러한 소유-무소유의 질서 또한 개인의 선택의 결과일 때만—사실 그러한 생각은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지만—잘 순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진화적 과정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은 몇 가지 결정적인 이론적 일면성을 갖고 있으며, 이 결함이 현실 판단에 대한 단견으로 연결되고 있다. 첫째, 이들은 신고전파경제학이 인간과 物(재화)의 관계만을 보는 것을 비판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소위 ‘財產關係’를 분석에 도입하고 있으나, 이 재산관계를 순수 경제적인 관계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 즉 결국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신고전파적인 인간-物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사회제도, 재산권(=인간-인간 관계의 체계)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재산권의 형태는 경치적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특히 국가사회주의의 경우 국가 자신이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정의하는 데 있어 중심에 놓여 있음을 잘 모르고 있다.

필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기업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자본주의부문을 육성하는 것이 좋다는 그들의 판단의 오류 때문이다. 즉 오스트리아인은 체제전환의 문제는 정확히 국가사회주의체제하의 國家權力이 崩壞한 데서 제기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이미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없어짐). 국가권력의 붕괴로 국가기업은 순수 국가사회주의하의 기업과는 다른, 특정 점유권자의 이권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붕괴는 또한

일관된 조정·의사결정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경제를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오스트리안은 재산관계의 명확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관계의 확립과정에서 시장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점에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관계가 잘 정의되어야 시장이 잘 작동된다는 명제와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간섭없이 두면 재산관계와 제도가 잘 발전할 것이라는 명제는 循環論法的이면서, 강조점이 이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환상은 나아가 자본주의가 어떤 강제도 없이 탄생하며, 어떤 강제도 없이 유지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라는 그들의 극단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유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결합이 잘 들어나는 논문이 Mckinnon(1991)이다. 그는 개혁정부의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이윤세 대신 가세와 기업에 대한 소득세·물품세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사회주의 권력해체→사유재산, 자본주의적인 공권력 확립→재정권력→조세제도 정비라는 수순을 거꾸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즉, 租稅制度 整備를 통해 사유재산제도, 시장제도 확립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비유컨대 매키논은 보자기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보자기 위의 새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마술(magic)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오스트리안의 ‘점진주의’는 실은 정치적으로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고전파적인 ‘급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다. ‘급진주의’는 대체로 위에서 본 ‘점진주의’를 뒤집으면 도출된다. 예컨대 이들은 보조금의 증대에 따른 재정적자,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을 시장기구의 강화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즉 개별기업에게 시장의 결과에 복잡하게 함으로써[소위 豫算制約의 強化(hardening of budget constraints)] 해결하고자 한다. 더구나 시장의 효과는 재산권의 형태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항이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해(예컨대 voucher scheme) 대규모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재산권은 지금처럼 ‘무주공산’으로 두면 안되지만 모든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부여되기만 하면 그 어떤 소유구조가 결과하진 상관없다고 본다.

그런데 신고전파입장이 가진 장점은 시장과정 자체만으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올바른 인식에 있다. 점진주의와는 달리 급진주의는 재산권 등 제반 제도는 시장이 작동하기 이전에, 또는 그 바깥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장점은 약점으로 곧 연결된다. 이들은 사적 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산권제도의 확립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전혀 —순진한 어린이 만큼이나—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급진주의

는 이미 중앙정부는 하부 생산부분과 분리됨으로써 어떤 효과적인 실천력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통화량 규모를 통제함으로써 인플레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등에 포진한 보수주의의 압력에만 저항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 방식은 이미 문제의 원인이 소멸된 것을 전제로 해답을 구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주의란 앞에서 본 대로 신국가사회주의의 해체과정에서 하나의 결과물로 등장한 하부생산조직의 존재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즉 각각의 생산에 포섭된 노동자 집단과 밀착된 경영자 집단들, 그리고 그들의 생존양식).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또는 정치적 입장으로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은 근본적인 종착역에 관한 대립은 결코 아니다. Filtzer(1991, p.1002)는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한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시장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영진이 더욱 노동자의 협조에 의존해 버린 데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설명은 우리의 분석과 일치한다. 앞에서 우리는 하층 지배계급이 體制崩壞→物資配分體系의 混亂過程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계급과 밀착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 과정은 또 정치적 상층계급이 하부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내포한다. 지배계급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동계급을 임금노동자로서, 그리고 자신들은 자본가,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전환시킬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분열·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손쉬운 것이라면 대립할 필요가 없거나, 있다 해도 곧 없어지겠지만 전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분열·대립은 필연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 분열과 대립은 어떤 '체제전환'의 방식이 채택되는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다른 형태를 취하며 일어날 것이다. 만약 현실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체제전환은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파시즘적인 '전체주의'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지금 보여지는 노동계급의 소극적 태도·냉담성 등은 체제이행에 도움을 준다고보다 장기적으로 전망을 불확실하게 하고, 쉽게 선동에 의해 휩쓸리는 '위험하며 성난' 대중을 낳는 조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4. 맺 음 말

본고의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체제붕괴전의 신국가사회주의하에서 국가권력은 이권공동체로 변화된 하부경제단위들에 의해 심각하게 잠식되어 어떤 강력한 집행력도 상실하고 있다. 개혁은 체제붕괴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새로운 형식의 '착취관계' 속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최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로의 분열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상황, 그리고 도달해야 할 목표에 내포된 모순 때문이다.

2절에서의 분석을 中國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경우는 시장(개혁) 사회주의 도입, 신국가사회주의 강화, 체제전환 등 세 가지 과정이 79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同時的이면서 壓縮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경우라고 분석된다. 또 각 과정의 중요도에서도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는 낮은 농업 생산력 때문에 대규모 인민공사를 소농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향이었다. 그런데 농업경영의 자율, 국가 강제 수매량의 감소, 농산물 수매가격 상승 등은 농업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켜 상품경제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였다. 이 기초 위에서 국가기업의 시장화도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지방 당-국가 관료와 기업경영진과의 밀착, 전 사회적인 이권집단 형성의 촉진, 후견인 체제(patronage system)의 심화 등 新국가사회주의의 모든 특징이 강화되었다. 이들 重層的 過程은 단계적인 경제성과의 면에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체제전환에 관한 점진주의자들(gradualist)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선의 개혁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 또한 이 특이한 경우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된다. 다만 필자가 하나의 가설로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생각과 그것의 단편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보이도록 하겠다.

중국의 정책방향은 생산력이 낮고 지방분권적 경향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중국이라는 상황에서만 채택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서 반복될 수 없는 실험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일견 최선으로 보이는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 최악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스케치하면 이렇다. 우선 다른 과정과 중복됨으로써 '체제 이행'에 있어 재산권의 명확한 확립은 더욱 방해받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도 재산권에 있어 국유제는 포기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위 '社會主義 市場經濟') 실제로 사유와 국유, 집단소유간의 관계에 있어 극히 모호한 형태들을 양산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시장경제를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재정수단(재정지출, 재정수입제도의 심화), 금융수단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다. 둘째, 시장도입은 신국가사회주의의 여러 이권집단의 빠른 성장 때문에 시장

(7) Shan(1992)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중경제가 부정·부패를 조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중경제 자체에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8) 장기적으로 비판적인 우리의 결론은 Nolan(1991)과 유사하다. 그런데 Nolan은 정치적 단주주의만 발전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소박하며 피상적이다. 우리의 이론에 따르면 권력분산은 오히려 체제붕괴와 혼란을 촉진시킬 것이다.

의 부정부성·낭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 과잉투자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듣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듯하다. 세제, 시장과 계획의 공존, 국유와 사유의 공존 등에 의존하여 당, 국가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또 이론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불가피함을 전망하게 된다.⁽⁷⁾ 중국의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발전도, 자본주의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보장하는 힘의 성장도 발견하기 힘들다. 그야말로 양립 불가능한 힘들의 무차별적인 성장과 그 효과는 중국을 알 수 없는 ‘검은 空間’(black hole)으로 이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⁸⁾

國民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전화 : (02) 910-4527

팩시 : (02) 919-2100

參 考 文 獻

- 김시중 (1993) : 『중국 국영기업개혁의 전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03.
- 박제훈 (1992) :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전진과 외국인 투자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10.
- 조원희 (1991a) : “맑스-레닌주의 철학비판을 위하여,” 『사회경제평론』 4, 한울.
- _____ (1991b) : “시장사회주의의 체제동학에 관한 일고찰,” 『현상과 인식』 15. 4.
- _____ (1992) : “전후 세계경제발전의 몇 가지 주요경향,” 한국공간환경연구회편, 『한국공환경의 재인식』, 한울.
- Alchian, A., and H. Demsetz(1972) :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2.
- Bardhan, P., and J.E. Poemer(1992) : “Market Socialism: A Case for Rejuven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6, 3.
- Bettleheim, C. (1988) : “Economic Reform in Chin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4, 4.
- Bonin, J.P. (1993) :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Producer Cooperatives: Will ever the Twain Mee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

- Bowles, S. (1985): "The Production Process in a Competitive Economy: Walrasian, neo-Hobbesian and Marxian Models," *American Economic Review*, 75, 6.
- Bowles, S., and H. Gintis(1990): "Contested Exchange: New Microfoundations of the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18, 2.
- Brus, W. (1972):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Routledge & Kegan Paul.
- _____ (1990):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Efficiency: The East European Contex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
- Brus, W., and K. Laski (1989):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Clarendon Pr.
- _____ (1990): "Product Market and Capital Market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 the Hungarian New Economic Mechanism," in O. Bogomolov(ed.), *Market Forces in Planned Economies*, New York Univ. Pr.
- Clarke, S. et al. (eds.) (1993): *What about the workers?*, Verso.
- Clarke, S. (1993a): "The Contradictions of 'State Socialism'," in idem et al. (eds.) (1993).
- _____ (1993b): "The Crisis of the Soviet System," in idem et al. (eds.) (1993).
- _____ (1993c): "Privatis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in idem et al. (eds.) (1993).
- Carr, E.H. (1966):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1923, vol. 1*, Penguin.
- Cho, Won-Hee (1989): "Value-theoretic Approach to the Dynamics of Competition, Monopoly-capital, and the State," Ph. D Dissertation, Univ. of London(한울, 1990).
- Davies, R.W.(1990): "Gorbachev's Social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Left Review*, 179.
- De Alessi, L.(1983): "Property Rights, Transactions Costs, and X-efficiency: An Essay in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73, 1.
- Devine, P.(1992): "Market Socialism or Participatory Planning?,"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4, 3-4.
- Dreze, J. (1989): *Labour Management, Contracts and Capital Markets*, Oxford, Basil Blackwell.
- Eggertsson, T. (1990): "The Role of Transaction Costs and Property Rights in Economic Analysis," *European Economic Review*, 34.

- Ericson, R.E. (1991): "The Classical Soviet-type Economy: Nature of the System and Implications for Refo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 4.
- Estrin, S., and J. Le Grand (eds.) (1989): *Market Soci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Filtzer, D. (1991): "The Contradictions of the Marketless Market: Self-financing in the Soviet Industrial Enterprise 1986~90," *Soviet Studies*, 43, 6.
- Fisher, S., and J. Frenkel (1992): "Macroeconomic Issues of Soviet Reform," *AEA Papers and Proceedings*, 82, 2.
- Flaherty, P. (1992a): "Cycles and Crises in Statist Economie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4, 3-4.
- _____ (1992b): "Privatisation and the Soviet Economy," *Monthly Review*, 43, 8.
- Hodgson, G.M. (1988): *Economics and Institutions*, Univ. of Pennsylvania Pr.
- Howard, M.C., and J.E. King (1989): *A History of Marxian Economics*, Macmillan.
- Johnson, S., and H. Kroll (1991): "Managerial Strategies for Spontaneous Privatisation," *Soviet Planning*, 7, 4.
- Kagarlitsky, B. (1992): "Russia on the Brink of New Battles," *New Left Review*, 192.
- Kolakowski, L. (1978): *Main Currents of Marxism (2)—The Golden Age*, Oxford Univ. Pr.
- Kornai, J. (1970):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s," *Econometrica*, 47, 4.
- _____ (1980): "Hard and Soft Budget Constraint," *Acta Oeconomica*, 25, 3-4.
- _____ (1990a):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W. Norton.
- _____ (1990b): "The Affinity between Ownership Forms and Coordination Mechanisms: The Common Experience of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 3.
- Kosta, J., and F. Levick (1987): *Economic Crisis in the East European CMEA Countries*, Research Project-Crises in Soviet-type Systems, Munchen.
- Koeves, A. (1992): "Shock-therapy versus Gradual Change: Economic Problems and Polic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989~1991," *Acta Oeconomica*, 44, 1-2.
- Kotz, D. (1992): "The Direction of Soviet Economic Reform to Capitalist Transition," *Monthly Review*, Sep.
- Laibman, D. (1992): "Market and Plan: The Evolution of Socialist Social Structures in

- History and Theory," *Science and Society*, 56, 1.
- Lange, O. (1964):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cGraw Hill.
- Lavoie, D. (1985): *Rivalry and Central Planning: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Reconsidered*, Cambridge Univ. Pr.
- Marglin, S. (1874): "What Do Bosses Do?—part I,"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6, 2.
- Marx, K. (1891):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Peking; Foreign Language Pr. (1972).
- Mandel, D. (1992): "Actually Existing Privatisation: An Interview with Yurii Marenich," *Monthly Review*, March.
- Martell, L. (1992): "New Ideas of Socialism," *Economy and Society*, 21, 2.
- Mckinnon, R.I. (1991): "Financial Control in the Transition from Classical Socialism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 4.
- _____ (1992): "Spontaneous Order on the Road Back from Socialism: An Asian Perspective," *AEA Papers and Proceedings*.
- Murrell, P. (1983): "Did the Theory of Market Socialism Answer the Challenge of Ludwig von Mises—A Reinterpretation of the Socialist Controvers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5, 1.
- _____ (1991): "Can Neoclassical Economics Underpin the Reform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 4.
- _____ (1992):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25.
- Nolan, P. (1991): "Prospects for the Chinese Econom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5.
- Nove, A. (1980): 『소련경제사(Ⅰ)』, 배왕규 역(1989), 명지출판사.
- _____ (1979): "Marx, the Market and 'Feasible Socialism'," in idem(1986), *Socialism: Economics and Development*, Allen & Unwin.
- _____ (1986): *Marxism and "Really Existing Socialism"*,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Pejovich, S. (1982): "Karl Marx, Property Rights School and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Kyklos*, 35, 3.
- Petras, J. (1988): "Contradictions of Market Socialism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18, 1.

Post, K., and P. Wright (1989): *Socialism and Underdevelopment*, Routledge.

Poznanski, K. (1992): "Market Alternative to State Activism in Restoring the Capit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25.

Preobrazhensky, E. (1926): "Socialist Primitive Accumulation," in A. Nove and D.M. Nuti (eds.), *Socialist Economics*, Penguin.

Rakovski, M. (1978): *Towards an East European Marxism*, Allison & Busby.

Sachs, J.D. (1992): "Privatisation in Russia: Some Lessons from Eastern Europe," *AEA Papers and Proceedings*, 82, 2.

Schmieding, H. (1993): "From Plan to Market: On the Nature of the Transformation Crisi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9, 2.

Schweickart, D. (1992a): "Socialism, Democracy, Market, Planning: Putting the Pieces Together,"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4, 3-4.

_____ (1992b): "Economic Democracy: A Worthy Socialism that Would Really Work," *Science and Society*, 56, 1.

Shan, W. (1992): "The Hybrid System and Continued Marketization of the Chinese Economy," *China Economic Review*, 3, 1.

Smith, R. (1993): "The Chinese Road to Capitalism," *New Left Review*, 199.

Stalin, J. (1926): "레닌주의의 제문제에 관하여," 윤시인 역(1990), 『레닌주의의 기초 레닌주의의 제문제』, 두레.

Thomas, S., and H. Kroll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5, 4.

Vanek, J. (1970): *The General Theory of Labour-managed Market Economies*, Cornell Univ. Pr.

White, G. (1993): *Riding the Tiger—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Macmillan.

Williamson, O.E. (1989):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R. Schmalensee and R.D. Willig (eds.),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Elsevier Science Publishers.

Winiacki, J. (1987): "Why Economic Reform Fail in the Soviet System—A Property Rights-based Approach," Seminar Paper, 374,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Univ.

of Stockholm.

_____ (1991a): "The Inevitability of Output Fall in Early Transition to the Market: Theoretical Underpinnings," *Soviet Studies*, 43, 4.

_____ (1991b):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Privatis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Post-Soviet-type Economies," *Communist Economies and Economic Transformation*, 3, 4.